

인터넷산업 성장 자율규제가 해답

정부 규제 선진화 · 합의에 의한 규제 바람직

인터넷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정계 · 학계 · 시민단체 등 범국가적 기구 및 포럼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한국전산원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달 14일 '미래인터넷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2005 인터넷 산업정책 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역기능을 해소하고자 하는 규제정책과 산업활성화 정책이 상충하는 현상에 대한 폭넓은 발표가 이루어졌다.

최희영 NHN 대표는 "지금 우리는 문명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고 있는 정보혁명의 한 가운데 서있다"며 "새로운 가능성과 부작용이 상존하는 이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단기간 처방에 급급해 한다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대표는 인터넷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정부 · 학계 · 시민단체 등 범국가적 기구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도 최근 1~2년 사이에 정부의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기관간의 중복규제, 다양한 이해 당사자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합의 도출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무선인터넷망 개방,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주소관리 등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인터넷 역기능에 과연 정부가 개입해야 하느냐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정부 규제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 이용자를 위한 규제, 합의를 추구하는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

히, 유 의원은 인터넷의 기본적 가치에 충실한 시민단체의 역할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자율 규제 차원의 대승적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의 역할은 자율 규제를 지향하며 조연과 지원에 방향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 성낙양 야후코리아 대표는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인터넷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규제가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 대표는 "인터넷 포털들이 최근 실적이 좋다고 하지만 이들 업체들의 매출을 모두 더해도 한개 통신사업자 매출의 30%도 안된다"며 무분별한 규제로 인해 인터넷 산업의 잠재력이 죽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부는 유연성 있는 규제 정책으로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도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인 정화 노력이 뒤따라

야 한다고 말했다.

금봉수 한국전산원 IT전략기획팀 팀장은 "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면서 인터넷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이에 따르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인터넷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법이념과 자율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콘텐츠 내용심의에 자율규제 도입, 자율규제 활성화를 통한 저작권법 보호,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추진, 자율규제 활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인터넷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제반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 박현수 기자

